

#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이 길, 조합원들과 당당히 헤쳐나가겠습니다”

-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 심인호 분회장 인터뷰

임용현 상임활동가

충남 서산에 생산공장을 둔 동희오토는 기아자동차로부터 ‘모닝’, ‘레이’를 외주 위탁받아 생산하는 완성차 1차 하청 제조업체다. 외주화의 바람이 거세 불어닥친 2000년대 초반, 납품형 외주 하청 전문사의 등장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의 판도를 재편했다. 원가 절감과 생산성 극대화, 노동법 규제 회피라는 세 가지 난제에 직면한 원청 자본은 OEM 생산방식이라는 묘수를 동희오토에서 꽃피웠다. 이렇게 태생부터 자본의 입맛에 맞게 기획된 현장이라면 그 안에서 ‘노조 하기’란 더욱 만만치 않을 것이다. 1,230여 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전부 비정규직인 현장에서 20년째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며 활동 중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 심인호 분회장을 만나 지난 여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4월 16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 작업장 민주주의 불모지에서 일귀 낸 희망

요새 심인호 분회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근 20년간 공들여 진행한 현장 조직화 사업이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동희오토 서산공장에 생산직 인원이 850여 명이던 시절, 절반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문을 두드린 이래 가장 많은 숫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2005년도에 저희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를 만들었는데, 회사 측에서 실체도 없는 유명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켰어요. 당시 사내하청 업체 8곳에 각 업체 소장, 반장, 총무 등이 이름을 올린 페이지 노조가 이미 설립 신고돼 있었거든요. 총회도 안 하고 조합비도 안 내고,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명노조였어요. 이 페이지 노조를 활성화해서 복수노조 상황을 악용한 거예요. 회사가 우

리 노조에 ‘불법 노조 프레임’을 씌워서 조합원 탈퇴를 유도했고, 그래도 버티면 계약 해지, 징계하고, 업체 폐업 등 온갖 방법으로 현장에서 쫓아냈었죠. 사실상 민주노조가 와 해되는 지경까지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동희오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할 권리를 단 한 치도 허용하지 않았다. 작업장 민주주의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곳에서 노조 할 권리에 한 걸음 다가설 계기가 마침내 열렸다. 심인호 분회장을 포함해 4명의 조합원으로 버텨온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는 2020년 9월 동희오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기아차지부 산하로 편제됐다.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현대기아차 자본과 교섭할 수 있는 교두보가 놓인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조합원들과 일상적인 소통 채널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어요. 익명 소통방이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 말고도 현장 주체 형성에 힘을 보태겠다는 조력자들도 지역 민주노조 활동가들 중심으로 여럿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이 소통방의 존재가 사측에 발각되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업체 관리자들이 소통방에 모여 있는 조합원들 색출한다며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또 어떻게 가입 경로를 알아냈는지 직접 소통방에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온라인 소통방 침탈 시도가 있었지만, 경험 있는 지역 활동가들이랑

우리 조합원들이 용케 잘 막아냈어요.”

비록 온라인 공간이었지만 조합원들과 지역 연대 동지들의 의연한 대처로 구사대의 탄압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정체를 감춘 채 회사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내던 관리자 무리를 온라인 공방 끝에 잇따라 ‘강퇴’시켰다. 사측과의 작은 전투에서 싸워 이긴 이 경험은 오랜 기간 서슬 퍼런 감시와 통제 아래 숨죽여 지내 온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린 사건이었다.

## 민주노조 가입 줄 잇자 감시와 협박으로 탈퇴 압박

온라인 대첩에 이어 벌어진 두 번째 전투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사측이 특근 계획을 일방적으로 잡은 게 도화선이 됐다.

“그때 당시만 해도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도 대체인력을 안 뽑아줬어요. 안 그래도 높은 노동강도 때문에 현장에선 ‘죽겠다’라는 말을 다들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는데, 회사는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수를 둔 거죠.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니까 결국엔 특근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특근 저지는 조합원들의 저력을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현장의 힘으로 사측의 특근 계획을 무위로 돌려낸 그 무렵, 분회 조합원은 200명에 육박했다. 이제 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놓고



▲ 2026.4.16. 새움터 사무실에서 만난 동희오토분회 심인호 분회장. 사진 : 한노보연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측은 판단했다. 민주노조를 깨는 데 한층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이 동원됐다.

“이제 사측도 현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거겠죠. 올해 새해 연휴 마치자마자 조직적인 탈퇴 공작이 시작됐어요. (공장) 화장실 칸막이에 누가 노조 홍보 스티커를 붙이는지 관리자들이 수시로 감시하기도 하고, 화장실 내부에 CCTV까지 설치했단니까요. 현장에 민주노조 가입 바람이 좀 일기 시작하니까 가입자를 색출하고 관리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종용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니 당연히 위축되는 조합원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때 조합 탈퇴서가 물밀듯이 쏟아진 적도 있었어요.”

CCTV에 하청업체 대표, 관리자까지 총동원한 동희오토 원청의 노조 와해 시도가 이번에는 실로 큰 파괴력을 보였다. 분회도 이대

로 가만히 당할 순 없었다. 다행히 업체 사장 등이 면담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조합원들의 녹취 기록으로 다수 확보되었고, 분회는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에 현장 조사를 요구하고, 언론사에도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이로써 작년부터 집요하게 이어진 사측의 노조 탈퇴 공작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회사의 직접적인 감시나 협박은 이제 눈에 띄게 줄었죠. 대신에 한 2월부터였나, 사측은 어용노조를 동원해서 우리를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온라인 소통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하청노동자들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어용노조 욕을 실컷 하긴 했거든요(웃음). 여하튼 사측도 이제 직접 공략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니까 아예 노노갈등 사안으로 돌아가려는 심산이겠죠.”

## 안전보건 교섭에는 노동강도와 인력 배치도 포함돼야

그동안 동희오토분회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다수 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가로막혀 노조 설립 이래 원청과 마주 앉을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다. 한국노총 소속인 교섭대표 노조가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 현장에선 불만이 쌓여 갔다. 동시에, 개정 노조법의 시행과 맞물려 소수 노조인 동희오토분회가 처한 이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도 무르익었다.

“1월 중순에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 등 원청 자본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안을 일제 발송했었습니다. 그때 동희오토 원청에도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지위에 있지도 않거니와 교섭을 요구한 사내하청노조(동희오토분회)는 당사 직원이 아니’라는 답이 왔어요. 전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 매번 무시하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회신이 온 거잖아요. 그래도 반응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웃음).”

4월 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희오토분회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충남지노위가 동희오토 원청을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 나아가 상급단체가 다를 경우 교섭 단위 분리가 가능하다고 본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심 분회장은 밝혔다.

“원청이랑 어용노조는 이번 노동위원회 결정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제로만 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최대한 좁히려는 게 저들 속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산업안전 의제가 화재, 폭발, 끼임 등 사고성 재해 예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희오토 현장엔 골병이 만연합니다. 생산 차종도 늘었고 설비 확충도 해서 이제 1년에 27만 대까지 완성차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갖췄는데, 도리어 인원은 자꾸 줄이는 거예요. 지속적인 인력 감축,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결국 골병드는 거잖아요. 이런 의제들도 안전보건 문제고 원청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 예방만 교섭 의제라는 원청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정도로 원청 교섭을 밀고 가려는 어용노조나 사실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져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았다. 충남지노위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동희오토분회와의 교섭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럼에도 심 분회장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이 길”을 변화를 갈망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당당히 걷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원청 교섭과 현장 조직화,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천신만고 끝에 초석을 다진 만큼 앞으로도 거칠 게 없다는 그의 말에 자신감과 결연함이 묻어난다. 